

# IMF시대의 제주경제

김 태 보

## 1. 서 언

지난해 말 갑자기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결국 우리경제를 IMF체제 하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외환채무국이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곧,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빚을 진 경우와 같다. 어떻게 우리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그동안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대출, 기업의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과잉투자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재무구조의 부실화가 원인이 되어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저하됨으로써 결국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583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외환부족이라는 유동성 위기가 아닌 금융위기 및 재벌위기로 대변되고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위기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금융자금 지원의 대가로 거시경제는 물론, 기업경영·산업구조·금융산업부분 등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은 제주지역 경제도 예외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IMF시대를 맞아 제주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장·단기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IMF시대 제주지역경제에 대한 파급영향과 과제

우리나라는 '97년 11월말 외환부족사태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우리정부와 IMF와의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거시경제의 운용면에서 대해서는 긴축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무역통상의 개방화를 확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업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통화긴축구조를 유지하고, 외환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부실금융기관을 정비하는 등 금융구조를 개혁하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개혁조치를 추진케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조기개방 및 개방 폭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IMF관리체제하에서 거시경제의 초긴축운동,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은 제주지역경제도 예외가 안되고 있다.

### ① 환율인상에 따른 영향

IMF 이후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은 농약, 농기계, 사료, 유류 등의 가격상승에 의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주도내 농업은 도내 총생산액(GRP) 가운데 약 26%를 차지하고 제주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역할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IMF이후 환율급등에 의한 농업용 수입 원자재의 가격 폭등에 의하여 농업생산비가 크게 올라 농가수지가 악화되어 있다. 감귤생산의 경우 환율상승에 따라 농약, 비료, 그리고 유류비의 증가에 따라 생산비가 최저 13%에서 최고 50%까지 증가하였다. 제주도 축산업의 경우도 환율급등에 의해 사료가격의 급상승으로 양축농가에게 엄청나게 생산비 부담을 안겨주고 있을 뿐 아니라 사료 품귀현상에 의해 양축생산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다.

수산업의 경우 최근 환율상승에 의한 유류가 인상으로 출어비용 가운데 연료비용 비중이 높은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및 근해연승, 근해통발분야의 출어비용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식어업 생산에 추가비용이 매우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식어업 생산에 추가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에 따라 제주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환율상승이 감귤의 수출경쟁력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데,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감귤의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감귤의 수출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제주관광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되고, 중국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해외여행자유화지역 지정과 No-Visa 제도의 도입, 중국의 주요도시간의 직항로가 개설됨으로써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② 고금리에 의한 자금경색

IMF 체제하에서 중소기업금융제도의 축소, UR협정상 금지보조금 성격의 각종 중소기업정책금융 및 세제혜택의 축소 등이 이루어지고 부실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어음·사채시장의 혼란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비율 요건충족을 위한 기존 대출 축소, 금융기관간의 M&A의 본격화에 따른 여신심사강화·기존 대출금 회수·어음할인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재정 및 통화의 긴축 운용,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국채발행의 증가, 환율 급등에 의한 물가상승 등이 금리인상을 발생시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제주도내 영세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도내 영세업체들은 직접 금융시장 또는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고금리를 수용하거나 사채시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따라 금융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영세업체 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대량, 연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의하면 IMF 한파에 의해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국에서 12,643개의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97개의 업체를 시작으로 올해 1월 3,323개, 2월 3,377개, 3월 2,746개 업체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145개 업체가 쓰러졌다. 특히, IMF 한파에 따른 기업도산이 서울보다 지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이 부도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0.64%에 불과한데, 지방은 같은 기간 1.41%에 이르러 2.2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은 제주지역 경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지역의

부도율은 지난해 12월 0.87%, 2월 1.15%, 3월 1.33%, 6월 1.42%로 이어져 IMF태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97년 12월에서 금년 6월까지 7개월동안 243개 업체가 부도로 쓰러졌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75개 업체, 제조업 43개 업체, 건설업 43개 업체, 오락·문화서비스업 27개 업체, 운수창고통신업 11개 업체 등의 순으로 부도행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 ③ 대량실업의 발생

IMF체제하에서 내수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을 저하로 신규 노동수요의 급감, 시장개방 및 산업구조조정으로서 기업간 M & A, 기업의 시장퇴출을 위한 정리해고가 단행됨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수는 137만명을 초과하여 실업률이 6.5%로 치솟아 지난 '86년 2월의 6.7%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말까지만 하더라도 65만명 수준에 머물던 실업자수는 금년 1월에 93만명, 2월 123만명, 3월 137만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6월엔 167만명으로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산업구조조정과정에 정리해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실업자수는 금년말 200만명선이 넘어 실업률이 최고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량실업 사태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내 실업자수의 경우도 IMF한파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말 실업자수가 1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까지 3천명에 불과하던 실업자수가 금년 1월 4천명, 2월 7천명, 3월 9천명, 6월에는 1만1천명으로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이미 3.3%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2천명, 제조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천명 등이 감소하여 실업이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④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대두

IMF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무역통상부문과 금융·자본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IMF의 협약에 의해 무역통상부문에 대해서는 WTO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제한 승인제 폐지, 수입처 다변화제도 폐지 등을 단행해야 하고 또한, 수입형 식승인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확대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전 산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자본 및 부동산 시장개방이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면 허용되게 되었다. 우선 자본시장의 경우 '98년에 와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총한도를 55%까지 확대하였고 채권시장의 개방은 물론, 양도성 예금증서(CD)나 신종기업어음(CP)과 같은 단기금융상품까지 확대 개방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케 되었다.

이제 제주도내 농업·수산업·관광·금융·유통 및 자본·부동산 분야 까지 시장개방에서 예외가 되는 부문은 없어져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제주경제내 어느 부문도 이젠 국제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IMF시대를 맞아 제주경제내 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제주도가 안고 있는 주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3. 지역경제의 대응전략

IMF시대 경제위기를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방의 대응전략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경제의 구성 단위로서 제주지역경제도 IMF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추고 대량실업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곧 제주지역 경제를 주도하여온 관광산업, 농업, 건설업 및 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적극추진함으로써 지방이 개방경제체제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의 체질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지방의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MF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관리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이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경영마인드를 갖고 독자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제행정기능 및 조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품질관리, 기업유치, 유통촉진, 특화산업진흥 등의 시책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획 및 재정관련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통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산업행정 분야의 인력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IMF경제위기 극복과 제주도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외적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 자치단체는 유망한 외국투자기업의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경우 국제수지개선,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전략부문을 선정하여 지역내 컨센서스하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산업 및 지방상공인의 협조체제하에 추진토록 한다. 이때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절차의 간소화, 현지홍보 및 설명회 개최, 사업용지의 공급 등에 관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투자유치에 계획적으로 대처한다.

셋째, 지역산업지원 수단을 WTO가 허용하는 국제규범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편토록 한다. 특정부문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금융또는 세제지원의 획일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개발, 인력개발, 환경시설의 개선, 지역개발,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지원 등 간접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토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알선 등의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정착을 기하도록 한다.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 관련 간행물의 외국어판 발간, KOTRA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상품 카탈로그의 정기적 발간, 대중매체 홍보, 외국시찰단의 초청을 통한 지방소개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강구토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우수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도입, 지역우수 상품에 대한 추천 상품제의 도입, 실시를 통해 대외공신력을 제고토록 한다.

넷째,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차원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규제완화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조례, 행정지침 등에 담긴 규제조항을 개선하여 지역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특히,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



폐해가 되고 있는 준조세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폐지하거나 요율을 인하하며 기업경영 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절차도 시혜차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

#### 4. 결 언

지금까지 IMF 관리체제하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환경변화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IMF시대를 맞아 제주지역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인상에 따른 농어업 투입원자재의 가격상승에 의한 농어업 생산비 증가,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재정 및 금융긴축 운용에 따른 고금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의한 관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분야의 업체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IMF한파에 의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제주도내 전산업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강화가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IMF시대 제주지역 경제의 발전방향은 제주도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모색되어야 하는데, 제주지역 경제를 주도하여 온 관광산업, 농업, 건설업 및 유통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내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면서, 한편 그 자체의 경제행정기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